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832호

i.honam@naver.com

2019년 12월 11일 (음력 11월 15일) 수요일

8천억원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진흙탕 싸움'

롯데·포스코 난타전…조합, 금품 제공 포스코 고소장 제출

시공사 취소 임시총회 조합에 맞서 조합 임원 해임 임시총회도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설사는 물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6만 465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 층 규모의 아파트 299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주수를 놓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불법 흥보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조합측은 불법 흥보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 임찰지침서와 국토비 정비사

업 계약무처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포스코는 관련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돼 있다면서 용적률이나 공사비 변경 없이 조합원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9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총 958명의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투표를 진행 501 명이 포스코건설을 지지했고, 롯데건설은 428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29표로 집계됐다.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조합은 포스코건설에 시공사 선정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흥보지침 위반 등이 제기된 포스코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조합은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이 담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이 포스코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들린 정황이 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9명 해임 임시총회를 21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나 임원 해임 총회 등의 결과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이어 각종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재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예쁜 트리 만들기" 10일 광주 북구청 로비에서 열린 나만의 트리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구청 직원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소품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사협력선언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산업재해추방에 노사협력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노사는 9일 화순광업소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박연규 소장, 김영호 노동조합지부장과 전남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주

관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노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사 모두에게 동절기 광산재해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확대하여 가

정과 사업장이 하나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연규 소장은 "고용불안과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생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에 저해 된다"면서 "우리 회사가 앞장서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노동조합 지부장은 "작업장내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보안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키는 등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전남본부는 전남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노동권의 건강권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인구 10만명 안 된' 광주 동구, '국'(局) 신설 가시화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

인구 수가 10만명에 미달하면서 3개 국으로 조직을 꾸려온 광주 동구에 1개국(局)이 신설될 전망이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제27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광주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 동구는 2개 실(기획예산실, 홍보실), 1개 관(법무감사관), 1개 단

(문화도시생태진단), 4개 국(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인문환경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동구는 2개 실(기획예산실, 홍보실), 2개 관(인문도시정책관, 법무감사관), 1개 단(문화도시재생추진단), 3개 국(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문도시정책관이 인문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되고 미래교육과와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가 합류하면서 인문환경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동구는 지난 10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개 국 추가가 가능하다

는 연락을 받았다.

행안부는 광주 동구의 인구가 2014년까지는 10만명을 넘는 차지 구였고, 2015년부터 인구 수가 10만명 이하로 감소됐지만 9만명 이하로 2년 연속 감소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1개 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특히 동구는 인구 9만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10만명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고 판단,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기준에 맞춰 조직을 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구는 인문환경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상정했다. 지난달 기준 광주 동구 인구는 9만8628명이다.

조인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에녹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